
IV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61
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65
3.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68
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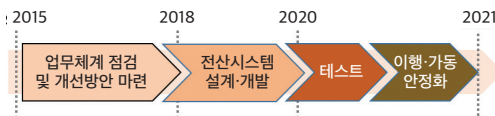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

한국은행은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가동 일정에 맞추어 2020년 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 연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후에는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참가기관들의 업무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그림 IV-1.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추진 일정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외 결제인프라 연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전문표준(ISO 20022)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기존 전문체계 분석, 도입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도입이 참가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

요국의 표준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ISO 20022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전자금융공동망 등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 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대고객 거래 결과 발생한 은행 간 차액결제대금이 거래일의 익영업일(오전 11시)에 결제됨에 따라 고객앞 자금을 선 지급한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은행별 순이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사전제공,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2016년과 2019년 중 국제기준(PFMI)에 맞추어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30% → 50% → 70%)한 데 이어, 2020년 이후에도 공표된 일정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표 IV-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2020.8.1.	2021.8.1.	2022.8.1.
(%)	80	90	100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담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1) 국제표준조직(ISO)이 규정하는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동 표준은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범금융산업메시지(전문) 제공을 목적으로 표준메시지의 개발방식 및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최근 미국, 스웨덴, 멕시코, 호주, 유럽 및 홍콩 등의 국가들은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실시간총액결제)의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 도입 시 우리나라에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²⁾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핀테크 혁신이 진전되면서 지급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지급결제시스템에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이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제도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업무-

동일리스크-동일규제’라는 일반원칙을 참가제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적절히 지원하면서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참가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2)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1> ‘최근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V-1.

최근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최근 주요국들은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¹⁾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2008년 5월 영국지급결제협회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PS(Faster Payments Service)를 구축하여 개인과 기업들이 소액의 실시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스웨덴, 인도,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국가	연도	시스템명	청산·결제 방식 ²⁾
한국	2001	전자금융공동망	DNS(연계 ²⁾)
영국	2008	FPS(Faster Payments Service)	DNS
인도	2010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	DNS
스웨덴	2012	BiR(Bankgirot Payment in real time)	RTGS
싱가포르	2014	FAST(The Fast And Secure Transfers)	DNS
멕시코	2015	SPEI(Sistema De Pago Electronicos Interbancarios)	RTGS ³⁾
미국	2017	RTP(Real-Time Payments)	RTGS
호주	2018	NPP(New Payments Platform)	RTGS
유럽	2018	SCT inst	RTGS
일본	2018	More Time System	DNS(연계 ²⁾)
홍콩	2018	FPS(Faster Payments System)	RTGS

주: 1) 금융기관 간 정산 내역을 최종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연차액결제(DNS) 또는 실시간총액결제(RTGS)를 적용

2)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를 RTGS 방식으로 처리

3) 매 3초 또는 300건 이상 누적 시 차액결제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운영주체

신속자금이체 도입의 편익

신속자금이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신속자금이체는 고객 간 실시간 자금이체와 인출을 연중 24시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자금이체 편의성이 높아진다. 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금흐름이 원활해지고 유동성 관리도 용이해진다. 또한 신속자금이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자금이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송금 및 전자송장 등이 도입되면서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신속자금이체의 주요 특징

초기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한 국가들은 금융기관 간 결제방식으로 이연차액결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총액결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용이해진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를 위해서는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24시간 운영이 필요하나, 최근 일부 국가²⁾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지 않음면서도 금융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신속자금이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초기 신속자금이체는 수취인의 계좌번호에 기반한 자금이체 방식만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이체 기능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 개인·기업 등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24시간/7일) 이용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신속자금이체 현황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 CD공동망에서도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서버점검 시간 등을 제외하면 24시간에 가깝고³⁾, 지급지시 후 이체처리 속도는 1~2초에 불과하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결제원은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급지시 전달, 확인 및 청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서 매 영업일 11시에 은행 간 최종결제를 처리(이연차액결제)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간 결제가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 간 최종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참가기관을 은행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간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 담보 제공 및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⁴⁾ 등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

각국 중앙은행은 신속자금이체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신속자금이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한다. 또한 자금이체 내역을 최종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자금

이 부족한 참가은행에 일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신속자금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민간기관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임에도,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연준은 이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과 금융기관의 시스템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구축·운영할 경우, 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금융기관의 담보 증권 제공부담 경감과 함께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 대비 등의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 도입 시 우리나라에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스웨덴 중앙은행은 운영기관인 정산센터(Bankgirot)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평일 07:00~17:00) 이외에도 실시간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 ~ 23시 55분이며,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 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4) 특정 은행의 차액결제 불이행으로 사전제공 담보를 초과하는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여타 참가은행이 사전 제공한 담보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IT부문 운영리스크 감시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IT부문의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IT부문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에 가동될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기관의 전산사고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사고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하게 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게 되면 사고 이력관리 및 운영리스크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산사고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운영리스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제고

IT부문 운영리스크 감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BIS 주관 모의훈련에 참가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훈련 결과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응체계 점검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인프라 평가지침 제정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PFMI」와 두 개의 추가지침서(「CCP 복원력 추가지침」 및 「FMI 손실복구 지침」)를 반영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평가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평가지침은 「PFMI」의 취지 내에서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되, 국내 금융시장의 제도 및 인프라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PFMI」 24개 원칙과 113개 핵심 고려사항 및 최근 발간된 2종의 「PFMI」 추가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 등이 포함되며, 「PFMI」 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이미 제정한 주요국의 사례도 참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정된 평가지침을 활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다면 동 업무의 투명성, 실효성 및 국제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이 국제기준을 반영하거나 한국은행의 개선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시체계 정비 추진

최근 핀테크 혁신 진전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결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12월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업체는 은행과 개별적인 제휴를 맺지 않아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의 은행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핀테크업체는 지급서비

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반면 지급서비스 유형과 결제구조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다양한 기업이 은행의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급결제제도 감시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과 같이 참가기관 간 리스크관리 역량의 격차가 크고 개방성이 높은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급결제통계 개편 추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통계를 개편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지급결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액결제 부문과 관련한 통계를 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비대면·비접촉 방식 전자지급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모바일 지급수단 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지급수단 관련 통계를 개편하여 펀딩 유형(선불, 직불 등), 접근 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등까지 세분화할 계획이다. 금번 통계 개편 시 2019년 11월 BIS CPMI의 지급결제통계 개편³⁾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 간 통계 비교의 용이성 및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3)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2> 'BIS의 지급결제통계 개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V-2.

BIS의 지급결제통계 개편 내용

BIS CPMI는 ‘지급 및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통계 (the BIS statistics on payments and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를 개편하여 2019년 11월 공표하였다.

금번 통계개편 과정에서 거액결제시스템, 증권 및 외환 결제시스템 관련 통계는 대부분 기존 체계를 유지하였다.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소액결제 부문은 지급서비스와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큰 폭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수단의 비대면·비접촉방식 구분이 신설되고, 국가 간 소액결제와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소액결제 부문에서 지급서비스 및 지급수단과 관련한 통계의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서비스 및 지급수단 제공기관 세분화

비은행기관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비은행기관을 기능별¹⁾로 명시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점포수, 지급계좌 잔액 등의 항목에서 비은행기관의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급수단 통계 세분화

지급카드의 포괄범위를 기존 플라스틱 카드에서 각

종 물리적 장치 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카드로 확대 정의하였다. 또한 지급카드 분류기준도 기존의 카드종류별(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분류에서 접근기술별(접촉식, 비접촉식), 카드발행자별, 비대면결제 가능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아울러 CD/ATM 단말기의 분류기준에 비접촉방식 단말기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자세한 현황을 제공하였다.

한편 계좌이체와 지급카드의 이용실적을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기존에 장표 여부별(장표형, 비장표형)로만 분류되던 계좌이체 통계를 소재지별(역내거래, 역외거래), 대면여부별(대면, 비대면)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카드종류별로 분류되던 지급카드 이용실적도 소재지별, 접근기술별(접촉식, 비접촉식), 대면여부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입출금 거래실적 통계는 기존의 CD/ATM 입출금 내역에서 소재지별(국내인출, 해외인출), 단말기별(ATM, POS단말기, 은행지점)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신속자금이체 통계 신설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속자금이체에 관한 이용실적 통계가 신설되었다. 신속자금이체 실적은 지급수단별(계좌이체, 자동이체, 기타), 취급기관별, 취급장치별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1) 지급계좌 등을 개설하여 자금을 예금하거나 전자지급수단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가치저장서비스 제공기관과 그 외 기타기관으로 분류하였다.

3.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활성화 지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저비용의 은행 계좌 기반 직불서비스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NFC 등 비접촉결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범용성을 높이는 한편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참여 유통사업자들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작될 예정(2020년 상반기 중)이다. 또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입금한도를 상향조정⁴⁾하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⁵⁾해 나갈 계획이다.

CBDC 전담조직 운영 및 연구 강화

한국은행은 2020년 2월에 신설된 CBDC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CBDC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향후 CBDC 관련 정책과제 기획, 법규·제도 및 기술 연구 등의 업무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행 내 유관업무(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금융, 발권) 부서와의 협조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등 국제사회의 CBDC 발행 추진 상황과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BIS 등 국제사회⁶⁾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CBDC 관련 기술연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학계 및 시장 전문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 연구

한국은행은 지난해 착수한 증권대금동시결제를 분산원장기술로 구현하는 모의테스트를 2020년 중 완료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모의테스트는 증권과 대금이 각각 상이한 원장에서 관리되는 환경에서 증권대금동시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또한 처리 성능, 복원력 및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현행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비교하고 거래 참가자의 결제유동성 및 결제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4) 현재 1만원인 1회 입금 가능 한도를 화폐 최고권액(5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1일 최대 입금 한도는 10만원을 유지)
5) 현재 CU(일부 가맹점)와 이마트24에서 제공 중인 가맹점 출금서비스를 편의점, 대형 할인점 등 여타 사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금융안정위원회(FSB), EMEAP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 등

아울러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대내외 금융 및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분산 원장기술 연구 및 활용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 보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점포와 ATM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소비자의 현금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금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저소득층과 ATM 설치 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ATM 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편제하고 있는 ATM 통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ATM의 전체 설치대수 외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ATM 설치대수, 취약계층인 장애인 이용 가능 ATM 설치대수 등을 추가로 편제할 계획이다.⁷⁾ 이후에는 국민의 현금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 조사결과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기술발전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전자지급서비스 관

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⁸⁾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은 금요강좌, 청소년 경제강좌, 한은 방문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민간사업자들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7) ATM의 과밀 또는 과소지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역별(도·시·군 등) 배치 통계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8)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2.>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V-3.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

국내 현금 사용 현황

최근 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인점포와 현금을 수취하지 않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함께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 정도가 매우 높고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조사결과¹⁾에 따르면 가계 총 지출에서 현금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2.1%로 2015년(38.8%) 대비 6.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기간 내에 현금 수요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 분야 적용 확대 등 변화의 흐름과 속도를 고려할 때 탈현금화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금없는 사회 관련 국내 주요 이슈

최근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

장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ATM 감소와 현금없는 매장 확산 등으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선택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TM은 현금인출 외에 계좌이체 용도로도 빈번하게 활용²⁾되면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접근 채널로도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말 ATM 설치대수는 11만 9,899대로 2013년말(12만 4,236대) 대비 4,337대 감소하였다. 특히 2013년 이후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 축소에 나서면서 영업점 내 또는 영업점 가까운 곳에 설치한 ATM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무현금 점포가 등장³⁾하고 있다.

국내 ATM 설치대수

(천대,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설치대수	124.2	121.3	121.3	120.3	121.5	119.9
증감률 ¹⁾	1.1	-2.3	0.0	-0.8	1.0	-1.3

주: 1) 전년대비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현금결제 거부 등 지급수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⁴⁾이 국

1) 한국은행 발권국이 발표한 '[보도자료]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2019.4.17일)를 참조하기 바란다.

2) '2018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따르면 CD공동망 이용건수 중 현금인출이 33%, 계좌이체가 55%를 차지하였다.

3) 일례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일부 점포를 '현금없는 매장'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객은 커피 구입대금을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앱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명은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특정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2019.5.30일)

회에서 발의되는 등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현금유통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은 자연재해, 대규모 정전, 화재,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결제의 지연 및 불능, 불안전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강원 영동지역 산불로 인해 기지국 및 인터넷회선 등이 소실되면서 산불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ATM 등이 이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전자지급수단 사용에 큰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소매상, 결제서비스 제공사 및 통신사 간에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현금은 비상 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지급수단으로서 백업기능(non-digital fallback)을 수행할 수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제한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현금이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유통될 필요성이 있다.

주요국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은 기술, 제도 등의 여건 변화와 함께 시장 및 경제주체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지급수단의 진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전을 지원하되 국민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존중하고 현금 접근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현금 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

은행의 현금 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 의무화를 포함한 「지급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현금 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판매자에게 현금수취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19년 5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19년 10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PFMI 등 국제기준 이행평가에 적극 대응

CPMI와 IOSCO는 2012년 4월 발표한 글로벌 지급결제 부문 표준인 「PFMI」에 대한 28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후속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PMI-IOSCO는 「PFMI」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상설 평가실무그룹⁹⁾(IMSG)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IMSG는 각국이 「PFM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일관성 확보를 통한 규제차익 추구 유인 제거를 목표로 회원국별 이행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점검 중이다.

표 IV-2. PFMI 이행평가 단계 및 내용

단계	점검 내용
1단계	각국이 법규 제·개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을 통해 PFMI를 규제·감독·감시체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한 후 IMSG가 추인
2단계	각국의 규제·감독·감시체계 내용이 PFMI 내용을 실제로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IMSG가 평가
3단계	각국의 개별 금융시장인프라 및 정책당국이 실제로 PFMI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IMSG가 평가

자료: CPMI-IOSCO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CPMI-IOSCO 운영위원회(SG)와 IMSG에 참석해왔다. 앞으로도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와 「PFMI」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사안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내 FMI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IMSG가 2025년에 실시할 예정인 우리나라에 대한 「PFMI」 2단계 이행평가 결과는 BIS와 IOSCO 등 국제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인프라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점검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FMI와 관련된 법·규정 등이 「PFMI」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관련 법·규정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이행,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국내 지급결제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19년 G20는 2020년 중 추진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선정하고 CPMI와 FSB에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PMI는 각국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9)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직원과 CPMI, IOSCO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CPMI는 CBDC,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이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FSB와 공동으로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CBDC 발행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CPMI는 BCBS와 공동으로 글로벌 외환결제리스크¹⁰⁾ 감축을 위해 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이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타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해 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역내 지급결제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고, 워킹그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CBDC,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역내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정책협력의 토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신흥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10) 외환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납입시점 차이로 인해 매도통화를 먼저 지급한 거래당사자가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리스크이다.